

#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

⌘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7.04 11:38

## [사진1]

“미친소 수입이야 말로 자해행위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3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하다'는 논평을 냈다. 이명박정권의 마구잡이식 공권력탄압이 거세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통해 국민건강권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보수언론들과 한나라당, 노동부 등이 민주노총 총파업 단행에 대해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불법 파업'이라며 왜곡매도에 혈안이다.

대책회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수입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 마당에 이것이 어찌 노동자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관계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노동자들의 반광우병쇠고기 투쟁을 옹호하고 “민주노총 파업이야 말로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정부 추가협상 사기극에도 불구하고 70%이상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60%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고 파업에 대한 지지글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이 파업의 정당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대책회의는 “얼마 전 방한한 로이 트로트만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그룹 의장도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하고 “로이 의장은 '정부는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그에 저항할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한국민의 절차의 자유 등 모든 권리가 존중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정부를 질책한 사실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윤희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서 신속하고 강경한 탄압을 하는 이유는 촛불을 빨리 끄기 위함이고 이 촛불이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과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두 달 넘게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미친소 수입을 강행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정부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으며, 정부는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비열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달 25일 경북공역앞 가두시위 과정에서 대책회의의 활동가 안진걸, 윤희숙 씨를 강제 폭력연행하고 구속한데 이어 30일 대책회의와 진보연대 사무실을 기습 압수수색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대책회의의 활동가 황순원 씨를 다시 구속했다.

국민촛불을 막아보려는 이명박정권의 유혈폭력진압과 무차별 폭력연행, 기습적 압수수색 등이 요란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대책회의 등이 5일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에 앞서 4일 오후 6시 불교계가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를 개최한다. 언론노조도 4일 오후 4시 KBS와 MBC에 집결해 공영방송사수 총력투쟁을 벌인다.

오는 9일에는 전국 농민들이 나서서 '쇠고기 협상 무효! 7.9 농민대회'를 열어 이명박정권을 규탄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